

국민주권예산 실현을 위해 2027년 예산안 편성방향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로 청취

- 핵심 투자과제 및 지출구조조정 관련 시민단체·민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시민단체·민간 전문가, 재정 구조 전환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 기반·지역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필요성 강조
- 제안된 의견은 3월말 배포될 예산안 편성지침에 적극 반영

기획예산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2월 27일(금) 두 차례에 걸쳐 '27년 예산안 편성방향 관련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개요>

- ▶ **(일자)** '26.2.27.(금) 10:00~12:00, 13:30~15:30 /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
- ▶ **(참석-오전)**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신승근 소장(참여연대), 정세은 교수(포용재정포럼), 강민수 상임이사(한국사회연대경제), 윤동열 교수(건국대), 우석진 교수(명지대), 우지영 교수(경희대), 이강구 선임연구위원(KDI)
- ▶ **(참석-오후)**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김현아 본부장(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센터장(조세재정연구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KDI), 이태석 선임연구위원(KDI), 한종석 교수(동국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예산편성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정보 공개 확대와 민간 참여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사업설명자료, 지출 구조조정 내역 등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대폭 확대(약 300 → 600명)하는 등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예산 정보 공개 확대와 민간의 예산 분석·제안 권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또한,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에서 나아가 최초로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부터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금일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 확충, 구조적 난제 대응 등 적극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성과·참여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배분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핵심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소규모 비효율·낭비성 지출까지 세심하게 발굴하는 한편, 금년부터 신설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27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예산편성 기준은 향후 재정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부분을 절감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재정의 구조 전환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지역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단장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가 예산안에 환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성과평가 결과가 정책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본부장은 “'27년 예산안은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장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민생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중장기 재정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재정 정보의 공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지출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국민과 함께 편성하는 예산안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27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3월말 대외 공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4-2330)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dkorea@korea.kr)
			사무관	김유현 (janes0425@korea.kr)

